

지난 9월 20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출범했다. 특정 신문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의 문제는 산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오다 이제 본격적인 세의 결집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언론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에 조선을 군대에 의존하는 강권통치를 하다 조선 민중들의 저항의 결과인 3·1운동에 놀란 일본제국이 일부 조선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채택한 문화주의 정책의 소산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에 의해 창간된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민족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차관제공 등에 의해 성장을하게 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성장은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게 헐저한 일부를 통하여 이룩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뒤지던 「조선일보」는 노태우 정권이 막을 내린 1990년대 들어서는 적어도 부수에서는 이들 신문을 절하기 시작한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비상계엄군으로서의 군이 자체에 자체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1980년 5월 28일 사설)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앞장서서 전두환을 구국의 지도자로 치켜세우며 군사 독재 정권

에 헐저한 일부를 하기 시작한다. 이 대기로 「조선일보」는 60만 군대와 17만 경찰, 80만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되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군부권력에 기생해 성장한 「조선일보」는 서서히 언론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분단상황과 반공정책을 최대

한 활용해 이데올로기 김증자 역할과 상업주의를 적절하게 융합한다. 이데올로기 김증자로서의 역할은 필요할 때마다 반공주의를 앞장세우며 박哼총장 사건, 최장집 교수 사건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매카시즘식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부었다.

그러면서도 문화면, 여성면의 강화 등을 통해 '부드러운 신문'이라는 인식을 주며 독자를 확보하는 철저한 상업주의 논리를 관철해나간다. 이는 한편으로 이데올로기 기구로서의 역할과 다른 한편으로 잉여 가치 추구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무리없이 조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수에서 우위를 차지한 「조선일보」는 다시 자본공세를 펼치기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임청난 자본력으로 판매망 확충에 나서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있다. 사실 신문판매 부수를 결정짓는 것은 신문의 질이 아니라 판매조직에 쏟아붓는 자본 동원력이다. 윤전기에서 나온 신문

2000년 10월 9일 2면

연세춘추 65년 광예원 116년

논단

논설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한 찬반

찬성

이 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판매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 판매망의 구축에 임청난 돈이 들어간다. 자본을 동원한 물량공세는 더욱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1996년 「조선일보」 남원지국 살인사건은 바로 「조선일보」의 물량공세에 대한 상대 신문의 격렬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가 이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까지 고액의 원고료 지급, 지면 제공 등의 대가로 포섭에 나선다. 다시 언론 권력의 위력을 과시하며 진보적인 지식에게까지 이데올로기 관리를 시작한 것이다. 극우 보수의 논리를 전개하던 신문에게 진보적인 지식인까지도 포섭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로 관리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관리대상이 된 지식인들은 「조선일보」의 다양성을 인정해 글을 쓴다고 항변한다. 일부 시민단체 운동가들은 언론 활

용론을 내세우며 「조선일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조선일보」가 정당한 방법으로 성장을 해왔다면, 그리고 공정한 보도

를 해왔다면, 우리는 「조선일보」가 내세우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군부 독재 정권에 기생해 언론 권력으로 성장하고, 반공 매카시즘을 상품화하고,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관리자임을 내세우며 사상의 재단까지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바람직한 모습의 언론 기관으로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뜻된 언론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수적인 신문으로만 남아야 한다. 그들은 특정한 사상을 재단하려고 하는 위험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 사상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양측에게 공정한 지면 배분과 기회를 줘야 한다. 최장집 교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상 공세는 공익적인 언론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개혁이 전략적인 목표라면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 운동은 언론개혁을 위한 전술적인 목표다.



임동욱

경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선일보」는 군부에 기생해

권력으로 성장, 반공을 상품화하고

이데올로기의 관리자임을 내세우며

사상의 재단까지 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한 찬반

반대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선일보」에 글을 쓰지도 않고 또 구독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기로 했단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까닭은 「조선일보」의 논조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극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자신들은 역사가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미리 알고 있으며, 또한 역사가 보다 빨리 그렇게 진행되도록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조선일보」가 자신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의 심나는 대목이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

관계가 다르고 신념과 정서가 다르면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뜻이 맞고 배짱이 통하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못하면 서먹서먹한 관계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어라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진보’ 세력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뜻을 관철시키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이른바 ‘극우’ 「조선일보」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즉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대로 자신의 철학과 사상에 따라 신문을 만들어 주의·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미 「조선일보」가 남아 시키지 않아도 잘 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장진 고려대 교수를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낙마시킨 일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미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대로 그리고 ‘반조선일보’는 ‘반조선일

보’대로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논리적인 형식에서는 이 대목까지 별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문제는 바로 이 다음에 서부터 시작된다. 즉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다. 이른바 ‘진보’를 내세우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인 영향력에서 「조선일보」가 차지하는 위상은 감히 ‘진보’ 세력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부분은 ‘진보’ 세력 스스로도 자인하는 사실이다.

왜 그런가. 국민 전체의 기준에서 볼 때 이른바 ‘진보’가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조선일보」와 같은 ‘극우’가 주장하는 내용이 보다 많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념적 지향이 만약 ‘극우’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극우’인 셈이다. 그러므로 「조선일보」의 뒤에는 절대 다수의 ‘극우’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소위 ‘진보’가 나서 ‘극우’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일은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이념적 지향이 잘못됐다고 못마땅해하는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소위 ‘진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향해 왜 당신들은 ‘극우’냐 하고 시비를 거는 꼴과 같은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극우’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그런 일을 한다. 기사를 만들어 독자가 보도록 하고 독자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데 소위 ‘진보’는 기사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운동’을 한다. 이른바 ‘진보’를

내세우는 「한겨레 신문」과 같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선일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딴지’를 걷는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만든 기사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일 자체가 못미땅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끼리 경쟁하고, 기업은 기업끼리 경쟁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없다고 학부형을 끌어들인다면 공평한 일이 될 수 없다.

신문은 신문끼리 경쟁해야 한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신문은 기사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독자와 국민의 몫이다. 재발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조선일보」가 나쁘다고 설득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선일보」가 좋은 신문인지 나쁜 신문인지 물어 봤느냐고요.”



유석춘

우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